

전북중앙

HOME > 기획특집 > 전북광장

농촌정책 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열어

✎ 이신우 | ㉠ 승인 2022.08.15 14:19

지역소멸위기극복 총177지구
다양한 농어촌개발사업 추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생활SOC
현대화-지역자원 특화사업발굴
농촌공간정비사업 농촌다움 복원
농식품부와 농촌협약 본격 추진
도내 5개시군 생활서비스 개선
최초 '농어촌개발부' 신설 운영
KRC전북지역개발센터 중심
새로운 농촌개발 정책 선도



농촌지역개발정책이 과거 시설위주의 개발정책에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서비스제공 위주의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05년에 본격적으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지난 1990년대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부터 현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농촌개발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또한 기존의 지역개발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협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농촌정책 제도를 도입했다.

전북지역의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의미와 추진 과정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농어촌개발사업, 의미와 추진 과정

농촌지역개발정책은 과거 시설위주의 개발정책에서 정주 공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생활서비스제공 위주의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 1990년대 시작된 농촌개발정책은 농촌지역에 부족한 정주생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개별 단위 사업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은 나아졌지만 농촌 인구감소, 고령화라는 큰 변화 속에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업목표 달성에는 큰 효과를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지역소멸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해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농어촌 주민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인구의 유입을 위해 농어촌지역 어디에서나 불편 없는 정주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어촌뉴딜 등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지역본부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협약, 농촌공간정비사업, 어촌뉴딜 사업을 중심으로 농촌개발 158지구, 어촌개발 19지구 등 총 177지구(총 1천510억원)를 추진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어촌지역에 부족한 정주 생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둔 사업이고, 어촌뉴딜 사업은 낙후된 어촌의 필수 생활SOC를 현대화하고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발굴해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또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의 난개발과 위해 요소가 되는 마을 주변의 공장, 축사, 빈집, 유헬시설 등을 정비해 농촌다움을 복원하는 신규사업이다.

특히 농촌협약은 주민 생활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두고 지역 여건과 사업간 연계성을 고려한 패키지 투자방식의 새로운 제도로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32개

시·군이 선정됐으며,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해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전북은 임실군, 순창군,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총 5개 시·군이 선정되어 5년 동안 국비 총 1천3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농촌협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어촌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소멸의 위기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개편, 농촌공간계획의 도입, 뉴딜사업의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 조직인 '농어촌개발부'를 신설해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농촌협약 제도 도입, 최초 '농어촌개발부' 신설

농촌 인구감소, 고령화라는 큰 변화 속에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업목표 달성에는 큰 효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인프라 중심의 개별사업 투자 방식이 아닌 실제적인 주민 생활서비스 개선에 목표를 두고 지역여건과 사업간 연계성을 고려한 패키지사업 투자방식이란 새로운 개념의 농촌협약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제도를 위해 지난 2020년 시범지구 12개 시군을 시작으로 2021년 20개 시군을 추가적으로 선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갈 계획이다.

전북지역은 지난 2020년에 임실군과 순창군이 선정됐고, 2021년 김제시, 무주군, 진안군이 선정돼 지자체별 향후 5년간 약 400억원(국비 300억원 이내)을 투자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농촌협약 준비부터 사업 선정, 협약체결까지 전라북

도, 지자체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원하고 있고 그 결과 전국에서 거버넌스 운영, 사업계획 적정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농촌은 농촌협약을 통해 농촌지역의 문화, 복지, 보건, 교육과 같은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통한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농촌협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지역개발사업의 성과분석,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서비스여건 조사 및 접근성 분석 등 전문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 지역주민, 중간지원조직, 지역대학, 한국농어촌공사 등 다양한 주체와 전문가의 참여와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설립 후 최초로 지역개발 전담부서인 '농어촌개발부'를 신설했다.

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개편, 농촌공간계획의 도입, 뉴딜사업의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농어촌개발부는 2센터 5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KRC전북지역개발센터를 중심으로 농촌협약 등 새로운 농촌개발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분야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어촌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과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어촌 조성을 위한 역할을 키워나가고 있다 또한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및 거버넌스 활동 강화를 위해 역량강화팀, 전북지역 특색에 맞는 건축기획을 위한 건축팀 등 농어촌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체계를 갖추게 됐다.

농어촌개발부 직원들은 활기차고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어 가는데 한마음 한 뜻이 돼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 농어촌공사 KRC센터, 지역개발 전문지원 조직 역할 톡톡

지난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역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등 농촌 지역 개발 정책에 핵심 역할을 한 KRC 전북지역개발센터를 최우수 센터에 선정했다.

전북센터는 정부와 학회, 중간지원조직, 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KRC(korea Rural Coporation) 지역개발센터는 주민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원활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농어촌공사 내 지원 조직으로 2019년 설립됐다.

광역단위의 9개 지역센터에 300여 명의 직원이 활동 중이며 매년 센터별 우수사례 공유와 성과를 시상해오고 있다.

주요 활동은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 농촌 마을 팸투어 등 홍보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심사 결과 최우수 센터에는 전북센터가, 우수센터에는 강원과 충남센터가 선정됐다.

상생 협력 부문에서 최우수 지자체는 진안군이 뽑혔다.

/이신우기자 lsw@



이신우 lsw@jjn.co.kr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